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건의

2021. 11

- 건의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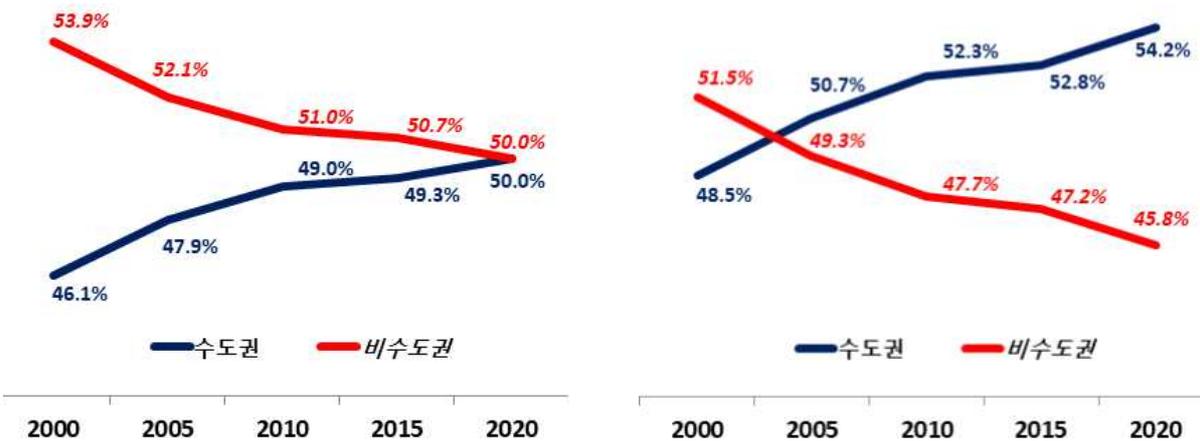
I.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비중 추이

[총인구 기준]

[20~30대 인구 기준]



※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주민등록연앙인구

-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부산·울산·경남에서 서울로 1만 1,700여 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2018년 이후부터는 50대 이상의 근로자 수가 30대를 상회하는 등 지역 산업의 노동 활기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

* 고용정보원, 경력 근로자 이동 통계

-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현황을 보면, 시·도 간의 이동 사유에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수도권 인구의 증가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전국 전입사유별 이동자수 및 구성

(단위 : 천명)

	전입사유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체	7,735 (100.0)	1,637 (21.2)	1,795 (23.2)	3,005 (38.8)	346 (4.5)	342 (4.4)	89 (1.2)	522 (6.7)
시·도 내 이동	5,201 (100.0)	766 (14.7)	1,129 (21.7)	2,455 (47.2)	182 (3.5)	260 (5.0)	46 (0.9)	363 (7.0)
시·도 간 이동	2,534 (100.0)	870 (34.3)	667 (26.3)	550 (21.7)	164 (6.5)	81 (3.2)	43 (1.7)	159 (6.3)

※ 자료 : 국토연구원,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Ⅱ

- 실제로 인재·정보·금융 등 압도적으로 기업을 영위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사업체 본사의 56.9%,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근로자를 비롯한 우수인력들이 수도권으로의 이전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정부도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더불어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도 인구와 산업집중 심화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음
- 오히려 균형 있게 분산되어야 할 산업자산과 전문인력들의 이전이 수도권 내에서만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의 지대상승과 인구과잉을 초래하고 있음

-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투자유치를 위한 기존 정책에 더해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 이에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판단됨
- 지난해 비수도권 전체의 법인세 징수액(15.6조원)은 정부에서 투입한 국가균형발전 예산(16.6조원) 보다 적은 금액임.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매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보다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2020년 비수도권 법인세 징수액 : 15.6조, 전체 법인세 징수액(55.5조)의 28.3%
-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나고,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음
- 또한, 연구 보고서에는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먼 지역일수록 세율을 낮추는 법인세율 차등적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이스라엘 등을 예로 들기도 했음. 이처럼 해외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멀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이 지역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선례가 있음
-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써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음. 이처럼 지역 장수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은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판단됨
- 이에 지역 장수기업들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세 혜택이 필요함

II. 건의

-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인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차등적용 건의
- 더불어 비수도권에 소재한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추가 감면 건의

2021년 11월

부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장 인 화

울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이 윤 철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 장 구 자 천